

전문대학 공학계열의 NCS기반 직업기초능력

유영국 교수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세무회계과)

만감이 교차하고 있다. 이 글을 쓰는 동안에도 ‘쓸 수 있나, 없나? 써도 되나, 안 되나...?’ 오만 가지 생각이 앞을 가린다. 정말 제대로 해 보고 싶은 열망과, 도저히 제대로 할 수 없는 이 구조의 답답함 사이에서 갈팡질팡 비틀거리며..., 그러나 나아가고 있다.

이른바 NCS—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의 ‘직업기초능력’ 분야에 관한 한 나의 입장과 스탠스가 그렇다는 것이다. 공감과 호의, 반감과 실망이 곳곳에서 교차하고 있다. 이제 아래에서는 NCS기반 직업기초능력에 대하여, 내가 이것을 접하게 된 경험담으로부터 시작하여, 이것이 왜 필요하고 절실하다고 생각하며, 그러나 이 상태로는 무엇이 걱정되고 우려스러운 부분인지를 내 나름의 ‘오만과 편견’(?)에 기대어 소개해 보기로 한다.

1. ‘NCS기반 직업기초능력’과의 만남

전문대학에서 직업윤리 등의 교양과목만을 가르치고 있는 나로 말하면, 당연히 NCS의 N자도 모른 채 십여 년 이상을 가르쳐 왔다. 그러다 한편으로 약간의 견문과 다른 한편으로는 내 스스로의 알량한 각성에 힘입어 이미 6~7년 전부터 현재의 ‘NCS 기반 직업기초능력’으로서의 직업윤리와 상당히 유사한 포맷으로 교수요목을 짜고 강의도 해

오던 터였다. 부끄럽지만 그 때는 그런 것이 있는 줄도 모르고 나 혼자 그러고 있었지만, 지금 와서 보니 직업기초능력 분야의 경우 2000년대 초반부터 이미 산업인력공단에서 교재로 만들어 쓰고 있던 것들을 말 그대로 National화 시킨 것이 지금의 NCS 학습모듈교재들인 셈이었고, 내 강의가 얼추 그와 유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었던 거였다. 이런 저런 핑계로 새 교재는 미처 만들지도 못하고, 그냥 강의안 파일만 수업시간에 빔 프로젝트로 띄워주며 강의를 해 왔다.

사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며 NCS라는 용어가 회자되고는 있어도 여전히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살아왔는데 2014년 8월쯤, 2학기 개강 준비를 위하여 뭐라도 건져 보려고 연구실에 나와 웹 서핑을 하다가 우연히, 정말 우연히도 ‘NCS 홈페이지’를 구경하게 되었다. 막 새 단장을 해놓고 ‘자료실’에 올라 와 있던 몇 안 되는 것들 중 직업기초능력을 교수·학습할 수 있는 모듈교재 파일들을 구경하게 되었다. [A.의사소통능력] 부터 시작하여 [B.수리능력], [C.문제해결능력], [D.자기개발능력], [E.자원관리능력], [F.대인관계능력], [G.정보능력], [H.기술능력], [I.조직이해능력], [J.직업윤리] 이렇게 10개 과목이었다. 각 과목 앞에 A부터 J까지의 알파벳 기호를 고유 식별기호처럼 붙여 놓고 있었다. 10개 과목 모두 다 <학습자용 워크북>과 <교수자용 매뉴얼>의 두 가지 자료가 각각 나란히 올라와 있었다. 또 특이한 것은 다른 9

개 과목은 모두 “~능력”으로 되어 있었지만 마지막 직업윤리 과목만큼은 “직업윤리능력”이 아니라 그냥 “직업윤리”였다. 윤리가 능력이 아니라면 직업기초‘능력’이라는 범주로 어찌 묶을 생각은 했을까 얼핏 궁금하기도 했다. 아무튼 지금은 홈페이지 구조를 개편해서 직업기초능력 학습모듈을 다른 메뉴로 옮겨 놓았지만 당시에는 '자료실' 메뉴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열람 조회 수가 떠 있었다. 대부분 10 회도 채 조회 안 된 따끈따끈한 자료들이었다. 직업윤리 교재를 보니 목차가 내 강의의 줄기와 대단히 흡사했다. 반가웠다. 눈이 확 띄었다. 선후배 교사들과 달리 이단처럼 수행해온 내 강의의 정당성을 입증이나 해 주듯이 목차가 나와 있었으니 말이다. 그러나 기쁨은 거기까지. 내용을 읽어가자 곳곳에 붉은 글자와 가운데 금(취소선)들을 그대로 두고 있었다. 쪽 수 표시는 아예 점검도 못 한 모양이었다. 본문의 내용이나 밀도도 너무나 들쭉날쭉 이었다. 다른 과목들도 다 그랬다. 심지어 직업윤리 과목의 어느 페이지에선 다른 과목 페이지의 머리글이 발견되기도 했다. 특정 페이지의 포맷을 여러 과목에 그대로 복사해서 쓰다가 미처 정리하지 못한 실수 같았다. 단순한 오·탈자가 아니라 대학교재로서는 맥락과 맞지 않은 용어나 어휘들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단기의 직업훈련기관용 교재이고, 좀 더 정제된 대학용 교재는 조만간 따로 나오겠지. 그냥 목차만 참고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파일만 저장해 두었다.

하지만 기대하던 ‘대학용’ 교재는 결코 나타나지 않았다. 지금도 모듈교재의 내용은 ‘일점일획’ 변함없이 그대로이다. 어떤 페이지에는 몇 줄에 걸쳐 밑금을 그어놓고 끝에 “(삭제)”라고 표기해 놓은 부분이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다. 일부 페이지의 붉은 글씨와 밑금 정도만 없애는 작업을 추가한 정도다. 이해는 한다. ‘그래, 명색이 국가 공공기관이 발행한 전자문서인데, 함부로 뜯어고칠 수가 있나...!’ 하지만 그리 생각하니 더 의문스럽기도 하다. ‘그렇게 무게 나가는 문서를 왜 그리 함부로 탑재하였던가? 6 개월만, 아니 한 달, 아니면 일주일만이라도 수정 기간을 가졌다면 그런 흠 정도는 해결하고 형식상으로 기본은 갖춘 파일을 올릴 수 있었을 텐데... 정

부2.0, 정부3.0을 활용하는 국민들을 필로 보나?...’ ‘무에 그리 급해서 이 모양으로 올려놓았을까?’ 당시의 이런 생각은 우리 교육부와 NCS당국의 정책추진 방식을 충분히 ‘학습 당하고’ 난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 뭘 몰라도 너무 모르던 순진 그 자체일 뿐이었다. 이 조급스러운 좌충우돌의 정책집행 앞에서, 이제는 ‘내’ 생각이 얼마나 무력하고 무의미한 것인지 충분히 깨닫고 있다.

2. 제도운영 과정에서 겪은 곤란

비단 직업기초능력 분야뿐만 아니라 NCS제도 전반이 위와 같이 급박한 몰아치기 방식으로 추진되다보니 일선 대학 현장에서 NCS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시행하는 과정 또한 온갖 시행착오에 시달리고 있다. 학교 차원에서는 나름대로 죽어라고 이 낯선 제도를 홍보하고 설명하고 시연하고 실습도 벌여 왔지만, 막상 NCS기반 교과를 운영하는 담당교수들은 학기 중에 “어어...” 하며 NCS제도의 시늉만으로 겨우 따라가다가 학기말 성적 평가 및 처리 기간이 되면 곳곳에서 비명을 질러댄다.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천지사방 분간하지 못 해서 조금이라도 경험과 실전에 앞선 교수들을 찾아서 코칭 받거나, 삼삼오오 모여서 업무처리 노하우를 서로 교환해가며 우선 급한 불부터 꺼 가고들 있는 셈이다. 그도 그럴 것이 홍보하고 설명하는 사람들, 심지어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는 조직이나 업체 사람들까지 온통 갑갑속 상태에서 겨우 벗어난 개척자들에 불과하니 그들조차 계속 시행착오를 겪으며 사태를 파악하고 정리해 가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더욱 치명적인 것은, 이 NCS관련 사업집행 성과를 평가하려 다니는 분들의 다짜고짜 식 형식주의 평가활동이다. 예컨대 필자와 관련된 해프닝을 한번 보기로 하자(아래의 [표] 참조).

(가) 중간고사나 학기말고사(엄밀하게 NCS 용어로는 직무능력평가1, 직무능력평가2로 불러야 한다.)의 출제는 모두가 학기 초에 <교과목명세서>와 <평가계획서>에 ‘확정·공시’해 둔 “수행준

거”(직업기초능력 과목의 학습מוד교재에서는 “학습목표”라는 용어로 대체하여 사용) 또는 관련 “지식/기술/태도”에 한해서만 출제하고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 (나) 특정 과목의 모든 챕터마다 수행준거(학습목표)는 이미 학기 초에 <교과목명세서>와 <평가계획서>에 확정·공시해 두고 있으며, 담당교수 임의로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직업윤리 과목도 <평가계획서>에 명시해 둔 그대로 ‘직무능력평가1’ 출제 시 8개의 수행준거 가운데서만 출제하였다. 다만 서술형 시험의 성격상, 8문제를 다 부과할 수 없어 그 중 일부만 추려서 3개의 문제로 출제하였다. 물론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러한 취지로 3문제만 출제할 것임을 학기 초부터 미리 공시해 두고 있었다.
- (다) 그런데 [표]에 있듯이 <평가계획서>에 그려진 평가내용의 기록양식을 보면 8개의 모든 수행준거를 ‘표’ 안에 열거하고 그 각각에 성취도를

표시하도록 그려져 있다. 그래서 수행준거가 열거되어 있는 그 모든 행마다 5점 척도의 성취도를 빠짐없이 표기하여야만 되고, 담당교수의 재량으로 8개 중 일부에 대해서만 출제하고 성취도를 표시했을 경우 NCS 규정을 어기는 것으로 판정한다는 것이다(그러나 ‘표’라는 것이, 나중에 안 쓰게 되더라도 일단 칸은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실제 어느 대학평가에선가 그러한 성적평가 방식이 교육부 과견의 대학평가 위원들로부터 심각한 지적 대상이 됐다는 전언이었다.

- (라) 그렇다면 이제 모든 대학과 교수들은 학생들의 성취수준을 합리적이고 정직하게 평가하려 애쓰기보다 교육부가 과견한 평가위원들의 평가기준—내가 보기에는 자의적 기준으로 해석된—을 맞추는 데만 신경을 곤두세울 것이다. 정작 학생들이 도달한 성취수준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것의 ‘향상교육’을 유도하려는 NCS의 원래 취지는 이로써 오히려 더 멀어질 가능

[표]

관련 능력단위요소 :	직업윤리, 근로윤리					
평가내용 :	서술형 평가 75% + 불시시험 퀴즈/꼭지시험 25% = 100%					
평가시기 :	7차시					
세부평가내용 :						
	평가 내용(*수행준거와 일치함)	매우 낮음	낮음	보통	잘 함	매우 잘 함
직무능력평가1	윤리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원만한 직업생활을 위해 필요한 직업윤리를 설명할 수 있다. 직업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유능한 직업생활을 위해 필요한 직업윤리를 설명할 수 있다. 직업생활에서 근면한 태도를 설명할 수 있다. 직업생활에서 정직한 태도를 설명할 수 있다. 직업생활에서 성실한 자세를 설명할 수 있다. 삶의 목표 설정이 근면 성실성을 길러 줄 전략임을 설명할 수 있다.					
평가방법 :	서술형시험, 기타					
평가 시 고려사항 :	1) 모든 출제문항은 100% 수행준거 안에서만 출제한다. 2) (서술형시험)은 가능한 한 대상 범위 전역에서 고르게 출제되되 문제당 25점 3문항으로 하고, 출제된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로 답안을 작성한 경우는 당해문제 만점(25점)의 절반 미만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3) (퀴즈/꼭지시험)은 담당교수의 재량에 따라 불시에 실시하되, 시간적 여유나 학급당 인원 수 등 수업 사정에 따라 '퀴즈'방식과 '꼭지' 답안지'방식 중 선택적으로 시행한다.					

▲ [표] 울산과학대학교 NCS기반 직업기초능력 교과 중 직업윤리 과목의 <평가계획서>(일부는 여기에는 지면 사정으로 중간고사 격인 '직무능력평가1'에 해당하는 부분의 평가계획만 보여주고 있음).
 출처: <http://ncs.uc.ac.kr/evaluation/evaluPlanSearch/popup?year=2015&majorCode=30102000&subjectCode=6280&professorCode=357915&classDivide=N&grade=1&semester=2&juyaGbcd=1&iphakYuhyeong=1&gwamokYuhyeong=001>

성도 있다.

직업윤리도 윤리인 이상 인문학이다. 인문학 과목의 '서술형' 평가를 교재의 모든 단원에 걸쳐 빠짐 없이 출제하고 평가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그것도 수행준거(=평가문제)를 아예 통합적으로 수정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은 주지도 않으면서 말이다. 인문학에서 서술형 평가를 한다는 것은 소수의 대표적 물음에 대한 진술의 수준을 통해서 전체적 이해도를 가능하겠다는 방식인 것이다. 이처럼 무리한 평가제도가 강행되는 한 학생들의 성취도는 진정으로 평가할 수 없게 되고 교육부의 대학평가 기준을 의식한 알팍한 편법과 업무 스킴만 양산하게 될 것이다.

평가를 받는 대학들은 평가결과가 자기 학교의 명운을 좌우하는 지라 평가위원들의 잣대가 어떤 것이든 따지지 못하고 순종하게 된다. 그 결과 추상적인 특정 규정을 융통성 있게 해석하면 훨씬 더 바람직한 집행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에도, 평가위원들의 형식주의적 조문해석에 따른 평가기준만이 곧 그 제도실행의 정답이나 최선책인 것처럼 고착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마치 서울만이 한국인의 수도라는 관습법이 존재한다고 판결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한국의 수도는 반드시 서울에만 두어야 한다.'는 새로운 헌법조항 하나를 헌법재판소가 창설해버린 것처럼 말이다(참고로 헌법과 법률의 모든 조항은 국민과 그 대표자인 국회만이 만들 수 있다.).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이나 집행 행태가 바람직하지 못하게 전개될만한 부분들은 상당기간의 시뮬레이션이나 시험운용을 거치며 제도적 규정과 시행 매뉴얼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다듬어놓고 시행해야 하지만, 이미 우리가 그런 경지를 기대하기에는 워낙 무망한 사회에서 살고 있지 않은가. 북미나 유럽이라면 5년 걸릴 일을 1~2년에, 10~20년 걸릴 일을 2~3년에 해치워야 하는 사회 아닌가. 나는 정말 '고도성장'이라는 말이 가장 두려운 말 중의 하나다. 거기에 치이고 로드 킬 당하는 가엾은 '극히 일부의' 개인이나 집단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그 때문에 치러야 하는 사회 전체의 우회적 비용은 또한 얼

마인가?

겨우 지난 해 10월 말쯤에야 교육부는『NCS기반 교육과정가이드라인』〈2015년 개정판〉을 내놓고 "NCS학습모듈을 해당 교과목의 내용 및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교수·학습 자료로 우선 활용-단, 수정·보완 시 NCS 학습모듈의 핵심내용인 '학습목표(수행준거)'를 수정하거나 '수행내용'을 전체 제거하는 것은 불가"라는 지침을 시달하였다. 문제되는 부분들의 발본적 개편이나 수정은 불가하고, 쓰는 사람 각자가 알아서 조금씩(만) 고쳐 쓰라는 뜻이었지만, 그래도 핵심문제는 여전히 계속된다. '학습목표(수행준거)'를 수정도 삭제도 말고 추가는 할 수 있다는 얘기 같은데, 그렇다면 '학습목표(수행준거)'를 죄다 평가해야 된다는 유권해석이 수정되지 않는 한 출제해야 될 문항 수만 계속 불어날 것 아닌가? 절차를 까다롭게 하더라도 수정·삭제의 길을 열어 두기는 해야 할 것 아닌가? 이리하여 '평가'와 관련해서 내가 겪을 곤란은 개정판 『...가이드라인』 체제 아래에서도 여전히 계속될 판이다. 그래서 나는 또 한 번 묻고 싶다. 100년지 대계라는 교육문제를, 왜 이리 단기간에 졸속으로 집행하고 있는지를.

3. 무엇을 어떻게 배우고 가르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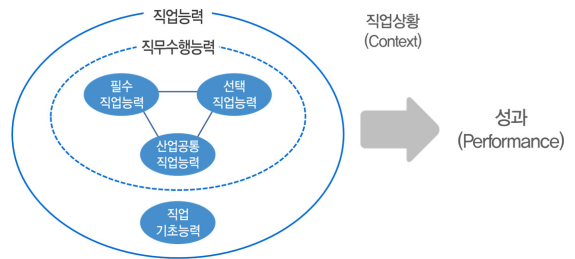
지난 1년 반 동안의 만남이 이처럼 짧은 환호와 긴 실망의 경험이었지만, NCS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쉽게 버릴 수는 없다. 일터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도록 교육기관에서 가르쳐 주고, 과도하고 불필요한 스펙 경쟁의 소모를 줄이며, 그래서 궁극적으로 학벌사회 아닌 능력중심 사회로 가자는 NCS 도입의 취지에 나 또한 절실히 공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도한 스펙 경쟁을 줄이고 능력중심 사회로 가자는 후 2자의 목표는, 적어도 지금의 한국사회에서는 NCS 도입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닐 거라고 나는 본다. 문제의 핵심이나 요체가 교육보다는 오히려 다른 데 있기 때문이다. 그 다른 문제(들)의 해결이 NCS의 성공적 안착과 확립에 도움은 줄지언정, 그 역관계는 극히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요컨대 내가 NCS에 거는 기대와 관심은 주로 직장에서 상

당 부분 바로 써먹을 수 있게 가르치도록 교육과정과 교육현장의 구조를 바꿔주는 문제에 있다. 솔직히 전부는 못 바꾸더라도 부분이나마 그렇게 개선할 수 있다면 그것만도 우리 사회로서는 상당한 혁신일 터이다. 위인설관(爲人設官) 식의 커리큘럼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가르치는 사람 자신이 스스로 배우고 바뀌어서 직업현장이 직접 필요로 하는 역량과 자질을 가르치고 훈련시킬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구조와 관행에 상당한 압박을 가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인 것이다.

현재 800여개 넘게 개발돼 있고 앞으로도 개발 분야를 더 늘려나갈 것이며, 또 해를 거듭하며 버전을 업데이트시켜 나갈 직무분야의 능력단위 표준들과 그 학습모듈 자체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필자가 언급할 역량도 없거니와 이곳이 그를 위한 지면도 아니다. 여기에서는 다만 직무수행과 관련한 직업기초능력의 의의와 가치에 대해서만, 그간에 품고 있던 생각을 요령부득일지라도 한번 풀어보기로 한다.

3.1 직업기초능력의 의의와 쓰임새

앞에 소개하였듯이 NCS기반 직업기초능력은 [A.의사소통능력]부터 [J.직업윤리]까지 10개 영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2015년 1월에 공동으로 펴낸 『NCS 기반 교육과정 가이드라인』에서는 직업기초능력의 개념을 “모든 산업 혹은 직업에서 기업체의 특성, 성별, 직급 등에 관계없이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능력”이라 정의하고 있다. 그 명칭이 과거에는 국내에서 흔히 “기초직업능력”(basic competencies)로 표기하여 왔으나 NCS체제에서는 “직업기초능력”으로 통일하고 영문 명칭도 “key competencies”로 되어 모든 직업 분야에 ‘필수적인’ 기본능력이라는 의미로 강화된 인상을 준다. 실제 이 용어들을 의미론의 관점에서 비교 분석해 보더라도, 기초직업능력이라는 용어는 ‘개별 직업능력’ 하나하나에 대응하는 하부요소 또는 보조요소라는 뉘앙스가 강한 반면, 직업기초능력은 ‘보편적인 직업능력’에 함축 또는 응축되어 있어야 하는 필수적 기본요소라는 뉘앙스를 주고 있다. 따라서



[그림] 직업기초능력의 개념 (교육부·한국연구재단. 『NCS기반교육과정가이드라인』 (2015.1.), p.23)

NCS가 각종 문건과 자료마다 그 공식 명칭으로서 ‘직업기초능력’이라는 용어를 확고히 사용하며 정립시키고자 하는 현상은 NCS의 철학을 바르고 정확하게 이해한 판단과 노력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도 곳곳에서 직업기초능력과 기초직업능력을 혼용하는 경우가 발견되는데 사용자들의 반성적 성찰이 요구되는 대목이라 생각된다. 대표적으로 NCS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는 직업기초능력 학습모듈 가운데 <학습자용 워크북>은 용어를 ‘직업기초능력’으로 수정·통일하여 사용하고 있는 반면 <교수자용 매뉴얼>들은 여전히 ‘기초직업능력’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두고 있다. 거기에는 10 과목 모두 앞부분을 장식하고 있는 ‘활용안내’ 편과 ‘지도지침’ 편에 끈질기고 철저하게 ‘기초직업능력’이라는 용어만을 사용하고 있다. 바로 옆에 나란히 올려놓은 <학습자용 워크북>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모습을 보인다. 고친 것은 무슨 뜻이고, 안 고친 것은 왜 그랬는지 주석이라도 하나 달아주었으면 보는 이의 자존심이 덜 상할 것 같다. 시리즈의 ‘제목’이요 말 그대로 ‘키 워드’가 되는 용어를 아무런 설명이나 주석도 없이 혼란스럽게 마구 내놓고 쓰라 해도 별 문제의식을 ‘갖지 않을’ 사람쯤으로 내가 취급당하는 그런 느낌이다. 법으로 명명하지 않았을 뿐 일종의 국정교과서인데, 키 워드부터가 이런 상태로 통용되는 마당에 교재 곳곳의 오·탈자나 <학습자용 워크북>과 <교수자용 매뉴얼> 간의 어색한 괴리 같은 다른 문제는 흠이랍시고 명함도 못 꺼낼 처지이다. 혹 아무진 학생들이 질문이라도 하면 무어라고 답해야 하나? 그냥 직업기초능력과 기초

직업능력은 같은 말이라고, 내 머리로는 다른 의미를 갖는 것이라 생각하면서도 학생들에게는 거짓으로 말해야 할까? 거짓을 대수롭잖게 여기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이렇게 계속 물려주고 말아야 하는가? 아니면 이것이 우리사회의 수준이고 우리나라 국격의 수준이라고 말해야 할까? 이렇듯 NCS 직업기초능력 학습모듈들의 실태는 생각하기에 따라 상당히 무책임해 보일 수 있게 올라와 있다.

그럼에도 각 과목 <교수사용 매뉴얼>의 '지도지침'에는 이 자료들의 기본 줄기가 국제적인 표준에 따라서 작성되었다는 투로 소개되고 있다. 예컨대 직업윤리 모듈의 교수사용 매뉴얼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듬직하게 실려 있다. "직업윤리표준에서 제시된 직업윤리의 지식, 기술, 상황 등의 선정은 미국의 SCANS, 호주의 Mayer 위원회, 영국의 AQA 등의 기초직업능력 표준과 하위능력요소를 분석하고 전문가 집단의 타당성 검토를 받아 이루어졌다."(12쪽) 이 부분은 다른 9개 과목들의 교수사용 매뉴얼에도 자랑스럽게 똑같이 기술되어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인용하고 활용하려면 정말 글로벌 스탠다드에 근접해 보려고 그 엄밀성과 정확성과 정직성부터 따라잡으려 애써야 할 것 아닌가. 국정사업의 집행 인프라를 이런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그 어설피 장비들로 사업을 집행시킨 뒤 평가는 칼날처럼 하겠다는 상황이니 나로서는 그것이 껍이나 이해하기 어렵다.

어찌 보면 형식적 문제에 '불과한' 용어사용에다 내가 너무 과도한 반응을 보인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워낙 솜을 때문에 높이 걸려 있는 것발의 흠 같아 보여서 나로서는 그럴 만도 했다고 생각한다. 아무튼 용어의 문제는 그쯤 해 두고, 이제 안채로 들어가 실질과 내용에 대해서 말해 보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것을 왜 "모든...직업에서...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능력" 즉 다시 말해 왜 모든 직업능력에 보편적으로 '필수'나 '기본'이 된다고 규정하였느냐의 문제다. 우선 NCS가 지정하고 있는 10개 분야의 면면을 따져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구성 내용이 드러난다. 즉 인문학적 성격의 의사소통능력·자기개발능력·문제해결능력·직업윤리 4개 분야가 있고, 사회과학 영역으로 조직이해

능력·대인관계능력·자원관리능력 3개 분야, 과학기술 영역으로 수리능력·정보능력·기술능력의 3개 분야가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자기개발능력의 경우 심리학과 교육학이, 문제해결능력은 심리학, 교육학, 철학과 논리학 등이 얹혀 있으며, 더욱이 직업기초능력으로서의 문제해결능력은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로 사정범위가 확장되기 때문에 과학기술 영역의 성격도 포함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실제로는 이들 분야가 정확하게 어느 영역의 학문적 정체성을 갖는다고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곤란한 면도 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인문, 사회, 과학기술 영역들이 망라됨으로써만 직업기초능력을 이루는 것으로 설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결국 어떤 직업이나 전문적 직능도 그 기초에는 통일체로서의 '인간의 삶'에 녹아있거나 관련되는 제반 요소를 포괄적으로 인식하고 해석하며 적용할 수 있는 식견과 역량이 갖추어지지 않고는 성공적인 직무능력의 발휘가 어려울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직업기초능력이란 모든 직종에서 두루 요구되는 보편적 자질이자 도구이기 때문에 교육과정에서 가능한 한 수학(修學, 이하 '공부'로 바꾸어 표현)의 폭을 넓게 잡도록 하는 것이 이상론으로서 바람직하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 반면 배우고 익혀야 할 것은 버겁도록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각자의 전공이나 향후의 진로계획에 따라 상대적으로 그 효용가치가 높은 분야부터 우선순위를 두고 공부토록 하는 것이 불가피하겠다. 또 실질적으로도 개개인의 전공과 진로가 어떤 분야인지에 따라 공부하는 분야의 상대적 효용가치에 차이가 나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 공학계열의 NCS 교육과정을 위한 직업기초능력으로 무엇을 어떻게 배우거나 가르쳐야 할 것인지 고민과 모색이 필요해 진다.

비단 공학계열뿐 아니라 모든 전공집단 학생들이 직업기초능력 공부의 우선순위를 선택하거나, 그들에게 우선순위의 방향을 조인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 서너 가지 검토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로 현재의 전공이 무엇이든 당대의 시대적 조건이나 환경에 비추어 누구나 일정 이상의 수준은 갖추어야 할 분야가 있다. 둘째로 전공분야의 본질적

성격과 발전추세에 따라 보다 더 급하거나 중요하게 공부해야 할 분야가 있을 수 있다. 셋째로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따라, 자신이 진출할 직무가 어떤 계열인지에 따라, 또 장차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꿈에 따라서 지금 우선순위로 공부해야 할 분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끝으로 자신이 현재 처한 학업능력의 도달수준도 고려되어야 한다. 학업수준이 상당히 높은 학생들에게는 일부 과목이 거의 불필요한 설명들로 가득 차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현재의 시대적 조건과 흐름에서 볼 때 적어도 젊은이라면 전공이 무엇이든 기본적인 외국어와 컴퓨터 능력은 필수적으로 갖추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는 정보화와 글로벌화라는 당대의 시대사적 특징과 흐름을 반영하는 요청이다. 이 양자의 능력이 결여된 사람은 어느 직업과 직종에 종사하든 유능한 역할수행이나 비중 있는 지위로의 성장이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의 우선순위는 직업기초능력 10개 과목 가운데 정보능력과 의사소통능력(특히 외국어능력 부분)일 것이다. 다만 NCS기반 정보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의 외국어 부분 학습모듈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제시되어 있어, 자신의 현재 능력 상태가 그보다 상위에 있다고 판단되면 차라리 별도의 채널을 이용해서 보다 더 고급의 과정에서 공부하는 편이 나으리라 본다. 직업기초능력 학습모듈 10개 과목의 파일은 NCS홈페이지에서 언제나 자유롭게 내려받을 수 있어 스스로 학습하거나 검토해 볼 수 있다.

둘째, 현재의 전공분야에 대한 본질적 성격과 장래의 추세에 대하여 정확하고 냉정하게 파악해 보아야 한다. 현재의 전공분야가 향후에도 산업적 활력을 유지할 것인가, 쇠퇴할 것인가? 활력이 지속되면 되는 대로, 아니면 아닌 대로, 그 분야를 더 분화·발전시키거나 대체하거나 어느 쪽이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보완이 필요할 것이고, 그 어느 방향에서 더 공부가 필요한 분야가 드러날 것이다. 만약 전공에 관한 현재의 지식이나 기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새로운 방향의 보완이 필요하다면 다른 영역의 지식·기술을 흡수하여 융합하는 것이 유력한 방안이다. 전자와 기계의 융합이 메카트로

닉스나 로봇을 낳았고, 의학과 전자의 결합이 의용공학의 꽃을 피웠으며, 컴퓨터와 인터넷과 전화기의 융합이 스마트폰을 내놓았고, 정보기술과 통계의 결합이 빅 데이터 산업을 일으키고 있지 않은가. 전기와 기계, 화학과 전기, 유전자와 전자 등 융합과 결합의 프런티어는 우리의 상상력이 고갈되지 않는 한 끝없이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 등과는 한참 거리가 있을지 모를 학부생 수준에서 그런 프런티어를 직접 개척하라는 주문은 무리일 수 있겠으나, 이미 개발되어 있는 그런 융합영역으로 공부의 관심사를 넓히거나 추가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니 그렇게 해 보라는 의미이다.

셋째, 동일 분야의 전공자라 해도 진로나 취업의 방향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자신의 적성과 흥미가 어느 쪽인지에 따라, 자신이 진출할 직무가 어떤 계열인지에 따라서, 또 당장은 정해져 있거나 주어진 길을 따라 취업하게 되더라도 장차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꿈은 무엇인지 그 꿈의 계열에 따라 지금부터 공부해야 할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대표적 직업심리검사의 하나인 Holland 검사에서 본인의 주된 성향 코드로 S형(Social, 사회형) 또는 E형(Enterprising, 진취형)으로 관정된 전자공학도가 있다면, 진출할 진로나 취업의 방향은 직접 기술을 개발하거나 생산을 담당하는 직무(또는 부서)보다는 생산 또는 작업현장의 장비를 유지·보수하거나 가전제품의 애프터서비스 업무를 담당하거나, 아니면 관련 기술을 가르치는 강사요원 또는 전기나 전자제품의 마케팅을 담당하는 영업업무가 훨씬 제격이다. 하는 일은 엄청나게 다르지만 그들 대부분의 공통 기반이요 학업의 배경은 전자공학이다. 전자공학이라는 공통의 전공기반이 없다면 위의 어느 곳에서도 일하기가 곤란할 것이다. 그럼에도 하는 일은 그처럼 천차만별이다. 이 각각의 일들에 더 효용이 높은 분야를 골라서 공부해 두는 것이 진로설계와 직무능력개발의 핵심이다. 이를테면 기술개발이나 생산업무라면 기술능력이거나 정보능력, 수리능력, 자원관리능력 등을 우선으로 공부하는 것이 요긴할 것이며, 그와 달리 기술과 함께 사람도 많이 접촉해야 할 업무라

면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직업윤리 등을 공부하는 것이 더 쓰임새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진로를 목적의식적이고 계획적으로 설계하고 그에 따른 직무능력개발을 수행해 나간 학생들은 취업 과정에서도 당연히 자신의 강점을 잘 살려서 응모 분야(희망 직무)를 선택할 것이고, 자기소개서 작성이나 면접 과정에서도 누구보다 분명한 정체성으로 풍성하고 알차고 임팩트 있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당장은 필요치 않다 해도 장차 어느 시점에 선가 그럴 필요가 생길 때, 지금 선택한 어느 한 과목의 초보적 지식이 그 때 예측할 수 없는 도움을 주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스티브 잡스가 가정형편으로 대학을 중퇴하고 무단 청강으로 한 학기 잠깐 배운 필기서체(calligraphy) 강좌의 수강 경험이 훗날 미려한 글꼴의 매킨토시를 탄생시키는 데 큰 힘이 되었다고 자랑하지 않던가. 비단 직업기초능력만이 아니라 잡스처럼 정말 끌리는 분야가 있다면 어떤 다른 교양과목이나 타 전공과목일지라도 기꺼이 도전해 볼 일이다.

끝으로, 내가 직업기초능력으로서의 직업윤리를 가르치는 방향과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해 놓고자 한다. 물론 NCS 학습모듈이나 그 주요 용어들로부터 전적으로 자유로울 수는 없다.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여러 부분들을 보완해서 강의하고 있다. NCS 학습모듈은 크게 직업윤리를 개관하는 첫 번째 단원 아래 그 하위영역으로서 근로윤리, 공동체 윤리로 나누어서 단원을 설정하고 있다.

먼저 직업윤리를 개관하는 첫째 단원에서 <윤리>, <직업>, <직업윤리>의 의미들을 먼저 설명해 주고 있는데, 모듈 교재가 설정하고 있는 이 단원의 학습목표가 나오서는 적잖이 불만스럽게 생각된다. 거기에는 “원만한 직업생활을 위해 지켜야 할 올바른 직업윤리를 배양할 수 있다.”라고 하여 직업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목표로서 ‘원만함’을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나의 강의는 원만함을 넘어서서 ‘유능함’을 강조한다. 직업생활의 성공적 수행과 자아실현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단지 원만하게 일하기보다는 유능하게 일할 것까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반적 시민윤리와는 달리 직업

윤리인 이상 원만함 뿐 아니라 유능함도 직업윤리의 목표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단원에선 직업윤리의 첫 번째 하위영역인 근로윤리 편이 시작된다. 여기에서 모듈교재는 <근면>, <정직>, <성실>의 덕목을 각각 제시하고 있다. 이 모듈교재에서는 ‘정직성’을 일에 대한 정직성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사람에 대한 신의를 지켜야 한다는 의미로 나는 공동체윤리적인 정직성까지 따로 논의해 주고 있다. 그리고 그 밖에 일하는 자세의 전문성과 자율성, 창의성, 협동성 등을 추가로 강의한다. 그러한 덕목들도 유능하고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위해서는 직업윤리상 실천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창의성은 문제해결능력에서, 협동성은 대인관계능력에서 좀더 본격적으로 다루는 주제임을 안내한다. 그럼으로써 여러 직업기초능력 분야의 상호연계와 시너지 효과를 통하여 직무능력 향상과 유능한 직업생활이 가능해 짐을 강조해 주고 있다.

셋째 단원은 모듈의 마지막 단원으로서 직업윤리의 두 번째 하위영역인 공동체윤리를 다룬다. 여기서는 <봉사>, <책임>, <준법>, <예절>, <성예절> 등의 덕목이 제시되고 있다. 먼저 ‘봉사’에 관한 한 학습모듈교재에서는 거의 일방적으로 업무를 위한 대고객 서비스 정신만을 강조하고 있는데, 나는 더하여 공동체적 나눔의 뜻으로서 봉사정신과 봉사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책임’의 부분은 추상적인 책임의식에 그친 모듈교재의 설명을 보완해 주고자 한다. 즉 일의 정확성과 엄밀성을 겨냥한 ‘질적 책임’의 개념과 작업 속도를 문제 삼는 ‘양적 책임’의 개념으로 나누어서 구체적인 책임의식을 심어 주려 노력하고 있다. 다음으로 ‘준법’에 관해서도 모듈교재는 국가가 제정한 국법규범 준수를 강조하는 선에서 설명이 그치고 있으나, 나는 오히려 직업윤리 덕목으로서는 회사의 복무규정과 작업수칙, 안전수칙 준수 등을 크게 강조해 주고 있다. 그것이 우리 직업현장의 문제가 되고 있는 안전사고와 산업재해의 방지를 위해서 대단히 절실한 덕목임을 강조해 준다. 안전사고 등은 특히 사고 장면의 동영상 자료 등을 시청토록 하여 경각심을 일깨워 주려 노력한다. 다음으로 ‘예절’과 ‘성예절’ 부분은 모듈교

재를 약간 보완하는 정도에서 진행한다. 끝으로 모듈교재에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는 '정보통신윤리'와 '환경윤리'를 나는 정보화와 환경위기라는 당대의 조건에서 반드시 중시해야 할 직업생활의 윤리 덕목으로 꼽고 이들 단원을 마지막 주에 추가하여 강의한다.

3.2 인문학, 어쩔 것인가?

작년 봄으로 기억된다. 내가 봉직하는 대학의 워크샵에서 있었던 일이다. 우리 교직원들에게 NCS 관련 특강을 베풀어 주러 멀리 타 지방에서 오신 어느 교수님께서 강의 말미쯤에 가서 직업기초능력의 의의에 대해서 대략 이런 말씀을 하셨다.

NCS 기반 교육과정의 취지는 무엇보다 직무적합도 높은 교육을 시킨다는 데 있다. 교양과목도 이제는 과거처럼 문·사·철 그런 것 말고, 직무에 직접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야 한다. 그것이 바로 직업기초능력을 도입하게 된 배경이고 이유다.

그 자리의 많은 분들이 그럴 듯하다고 생각하였겠지만, 나는 아연실색했다. 강의가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많은 분들의 여망을 아랑곳 않을 만큼 내 눈치가 없었다면, 아마도 손을 번쩍 들어 질문에 들어가고 장시간의 논쟁이 벌어졌을 것이다. 그 당시 나의 과감한(?) 자제력이 옳았는지 어쨌는지 지금도 나는 혼미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지금껏 그때의 그 맥락을 오롯이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만큼 충격이 컸다는 거다. 적어도 내게는.

이른바 '문·사·철'로 대표되는 인문학이 정말 그런 표현의 대상이 되어도 될 만한 학문인가? 다시 말해 '그런 것'을 공부하면 일(직무수행)을 하는 데 아무 쓸모가 없는, 아니면 거의 도움이 안 되게 하는 그런 학문일까? 그래서 직업 활동이나 직무수행의 관점에서 보자면 인문학을 공부하는 것은 비생산적이고 시간낭비일 뿐인가? '직업기초능력 10개 과목만 하더라도 NCS기반 교육과정 가이드라인이 직업능력의 일부라고 규정하고, 교육제도상 개설하라고

만들어 놓았으니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지, 졸업학점 내에서 학생들 기술 가르치려면 그러잖아도 버거운데 하물며 문·사·철이라니……!' 이렇게 낮두리하며 식자들 아는 척이나 하는 데 쓰이는 그런 것이 왜 필요한지 정말 알 수 없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교수님들도 꽤 많을 것이다.

위에서 물음이 증언부언 하기는 하였지만, 한 번 더 나에게 되묻는다. 정말 문·사·철이 그런 것인가? 그래서 내친 김에 문·사·철 또는 인문학이 무엇이며 사람들의 삶이나 직업 활동에 어떤 의의와 가치가 있을 지 꼭 한번 짚어 볼 가치가 있을 것 같다. 사실 '생상적인 것'을 좋아하는 분들의 생각에 교양(과목)의 원흉이 바로 문·사·철 내지 인문학일 테지만, 그런 인문학이 사람들의 직무수행이나 직무능력 발전에 어떤 기제의 작동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인지, 정곡을 잘 짚어서 명쾌하고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기는 사실 쉽지 않다. 나 역시 예외는 아닐 테지만 미숙하더라도 내가 해석하는 인문학의 가치를 소개하면서 글을 맺기로 한다.

인문학은 어느 분야든 다 종합학의 성격을 갖는다. 그것이 어문학이든, 사학이든, 철학이든, 예술평론이든 한 분야의 인문학을 제대로 연구하거나 학습하기 위해서는 온갖 다른 분과학들의 연구성과들을 학습하고 끌어와야만 그 대상이 제대로 이해되거나 설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의 신화나 설화, 또는 한편의 시나 소설, 음악이나 미술작품, 역사에 나타나는 한 시대의 사회상이나 인간상, 철학이 문제삼는 자연과 인간과 사회의 본질적 의미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인문학 그 자체의 경계를 뛰어넘어 온갖 다른 분야의 연구성과와 접근방법을 종합무진 누비고 다녀야만 자신이 탐구하는 그 대상이 비로소 의미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문학이야말로 다른 어떤 학문보다도 인간의 사고능력을 가장 입체적으로 길러주는 스승으로 위치하게 된다.

첫째로 인문학은 사람의 '분석하고 종합'하는 '인식기능'을 가장 효과적으로 육성해 준다. 인문학은 주지하듯이 사람에 대한 학문이다. 변화무쌍하고 다양하기 짝이 없는 인간의 관념과 지적 활동들은 온갖 연구방법을 동원하여 그들을 분석할 때에

만 비로소 해석이나 의미부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인문학은 실질적으로 종합학의 운명을 가질 수밖에 없다. 문학과 예술, 신화와 역사, 그리고 철학의 세계들은 하나같이 그러한 인간의 관념세계가 투영된 활동들을 소재로 하고 있어서 (그들을 철저히 분석할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분과학의 연구성과나 자료들, 심지어 자연과학의 성과나 자료들까지 끌어다 쓰고 활용하고 종합해야만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게 된다. 가령, 문학평론가 김윤식 교수는 시인 이상의 “오감도(鳴瞰圖)”라는 연작시를 해석하기 위하여 프로타고라스의 기하학과 칼 포퍼의 과학방법론을 인용하는가 하면, 뉴턴의 역학에서부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 프로이센의 헌법학과 프랑스 혁명사, 정치경제학과 근대국가 성립사, 기호학과 언어학 등 별별 이론과 용어들을 총동원한다. 그런 자료들을 접하고 체험하고 끌어다 쓰는 방법을 훈련함으로써 비로소 그 난해한 시의 의미를 설득력 있게 해석해 낼 수 있는 것이다. 신화나 역사의 세계 또한 마찬가지다. 예컨대 미술사를 전공하는 유홍준 교수가 6~7세기의 도자기와 예술품을 해석하기 위하여 일본-한반도-중국대륙을 무대로 펼쳐지는 그 당시 동아시아 전역의 국제 정치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동원해야만 하는 과정도 인문학의 그러한 다학문적 종합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요컨대 그것을 연구하든 학습하든, 인문학은 그 활동 자체가 바로 최고도의 인식기능을 훈련하고 실행하는 장이 되는 것이다.

둘째로 인문학은 사람의 ‘비판능력’을 자극하고 고도화시켜 ‘판단기능’을 잘 작동케 한다. 왜냐하면 인문학은 항상 비판을 통하여 대상을 분석하고 해석과 이해의 잠정적으로나마 최종적인 완성을 해내기 때문이다. 인문학의 탐구대상인 인간의 행위에 대한 이해와 해석의 기능은 사실 비판활동을 통하여 발동되고 성립된다. 선악(善惡)과 호오(好惡), 미추(美醜)에 대한 비교와 비판이 곧 이해와 해석의 논리적 선행 작업인 것이다. 이 때 그 비판의 대상은 주체와 대상을 가릴 것 없이 중립무진이다. 주체에 대한 비판이란 바로 사고하고 비판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비판을 말한다. 이는 일차적으로 자신의 행동과 삶에 대한 도덕적 지침의 원천이 되고 주체적

행동과 삶의 추동력이 된다. 국내외에서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인문학 강좌를 시행하여 그들이 자활의지를 회복케 되었다는 사례들의 보고는 바로 그러한 주체비판의 가능성과 효능을 잘 보여주고 있다. 자기비판은 또한 이어서 외계에 대한 비판의 정당성을 확보케 해주며 다른 인간이나 인간 일반에 대한 비판, 혹은 사회나 사물에 대하여 비판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러한 외계 일체에 대한 비판의 기능들이 곧 여러 인문학의 일상적 기능인 것이며 문학, 역사, 철학, 예술의 일체가 바로 비판기능의 과정과 귀결로써 탄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문학의 성과는 단적으로 비판능력의 성과이며 비판활동의 소산이라 할 수 있는 바, 그것의 탐구나 학습은 바로 그러한 능력과 활동의 성장과 발달을 의미케 된다.

셋째로 인문학은 ‘상상력’의 원천이자 보고로서 ‘창조기능’을 자극하고 촉발시킨다. 문학과 예술, 역사와 철학은 모두 인간 관념 활동의 소산으로서 대부분 상상에 의해 창조된 스토리의 세계로 구축된다. 문학과 예술이 상상에 의한 스토리의 반영이자 결과물임은 자명한 것이어서 설명을 요하지 않으나, 역사와 철학도 관념 활동의 기록과 표현인 점에서는 모두 광의의 스토리라 말할 수 있다. 추상화된 철학이나 역사서의 난해한 기술들은 결국 상상을 통한 스토리와 드라마로 환원시킬 때에 실감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대중에게도 소비되고 흡수되기에 이르는 것이다. 심지어 인류학이나 고고학도 따지고 보면 선사 인간의 삶에 대한 상상으로 구축된 창조적 스토리의 일종인 것이다. 그것의 물적, 사실적 증거는 어느 면에서 그 스토리의 설득력을 높여주는 조연 배우의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에게는 이처럼 상상으로 창조된 인문학적 성과를 생산·탐구하고 감상·학습하는 과정이 곧 다시 새로운 상상과 창조의 기능을 재생산해내는 에너지와 열정의 분출이라는 무한순환으로 반복된다. 인문학을 통한 이러한 인간의 상상력은 새로운 문명과 문화의 창조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과거의 세계를 들여다보거나 미래의 세계로 나아가는 과정의 불완전한 정보들을 대체하거나 보완해 주는 창조적 기능도 수행한다. 철학자 최진석 교수는 서구사회

에 발달된 인문학적 상상력이야말로 그들로 하여금 현대의 다른 세계가 수행하지 못하는 새로운 문명과 기술의 아이템, 문화와 예술의 새로운 장르들을 창출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으며, 동시에 도덕적 혁신과 현대문명을 이끌어 가는 지도력의 원천이라고 주장한다.

이상과 같이 인문학은 그 자체의 본질적 속성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인식, 판단, 창조의 기능을 자극하고 길러주는 독특한 가치가 내재되어 있다. 인문학을 하되, 얼마나 제대로 해 내느냐의 문제이지 인문학 자체가 매 맞을 일은 분명 아닌 것이다. MIT가 인문학 전공의 노암 촘스키 같은 세계적 석학을 초치하고 인문·예술·사회계열 대학원을 힘들여 육성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점에 있지 않겠는가. 오늘날의 과학기술들은 융·복합의 추세가 보편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여기서 융·복합이라 하면 보통 기술과 기술의 융합을 말하지만, 사실 밑바닥에는 단지 기술과 기술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와의 결합을 통해서 기술은 비로소 세계화된다.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SNS산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을 네트워킹이라는 정보사회의 새로운 문화현상에 적용함으로써 급속히 확산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때 문화라는 것은 결국 사람의 삶 또는 그 삶의 양식 자체이기도 하다. 유흥준 교수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서 우리나라는 국토 전체가 박물관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땅에서 살아오며 생활해 온 사람들의 삶의 흔적들을 모두 문화재로 인식하는 맥락에서의 이야기였다. 그렇다면 현대 기술이 문화와의 융합으로 산업적 활력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문화를 연구하고 스스로 문화가 되고 있는 인문학과와의 융합을 모색하는 발상과 의지가 매우 중요해 진다. 현대 자본주의 경제에서 기술은 기술 자체만으로는 끝이 아닌 것이다. 이처럼 기술과 산업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인문학은 더 이상 비생산적인 것도, 낭비적인 것도 결코 아니다.

포드 시스템으로 대표되는 산업사회는 분업과 협업에 의한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사회였다. 그 때는 만들면 모두 팔리는 생산기술 위주의 시대였다. 그러나 제조기술이 정보기술과의 융합을 통해서 생산능력이 무한대에 이르자 이제는 기본적 소비재는

모두가 다 보유하게 되었다. 생산기술이 전부가 아니게 된 것이다. 아무리 생산해 놓아도 팔리지 않으면 오히려 짐 덩어리가 되어버린다. 팔리게 하는 기술이 기업과 산업의 사활을 거머쥐게 된 것이다. 제품을 설계하고 만드는 기술도 판매의 관점을 반드시 반영해야 하고, 영업과 홍보 또한 사람의 소비심리와 트렌드를 놓치고서는 성공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른바 ‘소비사회’의 도래이다. 과거처럼 생산된 것이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를 이끌어내야만 생산이 가능해 지는 사회인 것이다. 이러한 소비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인문학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사람의 삶과 사람의 마음, 욕구와 관념을 탐구와 학습의 대상으로 삼는 인문학의 잠재력을 활용하여야만 오늘의 산업과 기업들은 제품을 팔고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굴지의 대기업들이 하나같이 인문학의 중요성을 합창처럼 외쳐대고 있다. 삼성전자는 수만 명의 인문학 전공자를 뽑아서 훈련시킨 다음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으로 쓰겠노라 공언하였고, 삼성그룹 직무적성평가에서는 홍선대원군의 업적과 목민심서, 과학 발명품의 발명가를 맞추는 문제를 비롯해 분서갱유, 아편전쟁 등 중국역사 지식을 묻는 문제가 나오고 있다. 현대기아차그룹의 신입 인적성검사에는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을 어떻게 보는지, 역사적 사건과 현대차의 핵심 가치를 연관짓는 에세이 문제를 내놓아 응시생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기억력, 판단력, 비판적 사고력 같은 생각하는 힘을 발달시키기 위해 역사책을 읽으라고 강연장에서 직접 외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바꾸어 말해야 한다. “과거처럼 문·사·철 그런 것 말고, 직무에 직접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야 한다.”가 아니라, “과거처럼 문·사·철에 덮어놓고 눈감기보다, 오히려 문·사·철과의 적극적 융합을 통하여 직무에 필요한 인식력, 비판력, 창조력을 배가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직업기초능력이 겨냥하고 있는 ‘직접적 업무 연관성’도 필요하지만, 그 위에 궁극적으로는 문·사·철 인문학을 지금보다 보강해 나가는 노력이 현명하고 진취적인

교육과정을 위해 진정 필요한 방향이 아닐까 한다.

참고 문헌

- [1] 교육부·한국연구재단. 『NCS기반교육과정가이드라인』, 2015.01.
- [2] 교육부·한국연구재단. 『NCS기반교육과정가이드라인』(2015년 개정판), 2015.10.
- [3] 나승일 외. “기초직업능력 자격화 방안.”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4권 1호, 2012.03.31., pp.131-160.
- [4] 유흥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일본편2, 창비, 2013.
- [5] 이관춘. 『직업은 직업이고 윤리는 윤리인가』(2판), 학지사, 2006.
- [6] 울산과학대학교 NCS운영센터. 『NCS기반 교육과정 운영 지침서』, 2015.6.
- [7] 장 보드리야르 지, 이상률 역. 『소비의 사회』, 문예출판사, 1992.
- [8] 한국직업능력개발원·교육부. 『NCS학습모듈개발매뉴얼』, 2014.
- [9] 국가직무능력표준 홈 > 자료실 > 직업기초능력 http://www.ncs.go.kr/ncs/page.do?sk=P1A4_PG09_005
- [10] 김윤식. “〈오감도 16호〉를 찾아서,” 울산대학교 Fellow Professor 동영상 특강 <http://mbook.ulsan.ac.kr/popup/mediaPlayer.aspx?idx=67>
- [11] 네이버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22&aid=0000112040> [검색일: 2016.01.13.]
- [12] 울산과학대학교 NCS기반 교육과정 운영관리V.1.0 <http://ncs.u.c.ac.kr/evaluation/evaluPlanSearch/popup?year=2015&majorCode=30102000&subjectCode=6280&professorCode=357915&classDivide=N&grade=1&semester=2&juyaGbcd=1&iphakYuhyeong=1&gwamoKYuhyeong=001>

제재약력



성명 : 유영국

◆ 학력

- 1985년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정치학사
- 1987년
부산대학교 대학원 정치학석사
- 1995년
부산대학교 대학원 정치학박사

◆ 경력

- 1989년 - 2010년
부산대, 울산대, 울산과학대학교 등
시간강사
- 2006년 - 2007년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연구교수
- 2011년 - 2016년
울산과학대학교 강의전임조교수